

최저임금·경기악화에... 자영업자 대출연체 '이상급증'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1.43% 달해
전년도 1.32% 보다 0.11%p 늘어
저소득·저신용 연체자 두드러져

〈자영업자 금융채무불이행 현황〉

(단위 명.%)

시점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1분기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전체채주	1,606,145	1,779,915	1,831,112	1,874,519	1,913,392	1,946,113
채무불이행채주	21,868	23,462	24,880	25,996	26,995	27,917
비율	1.36	1.32	1.36	1.39	1.41	1.43

영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일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상승과 경기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중심으로 연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에서도 연체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한국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2017년부터 채무불이행자 비율 ↑

17일 나이스신용평가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개인)이 보유한 기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향 안정화 추세를 타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망라한다.

2018년 말 기준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는 2만7917명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자(194만6113명)의 1.4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말(1.32%)보다 0.11%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14년

말 1.59%, 2015년 말 1.43%, 2016년 말 1.36%였다. 즉 2014년 이후 하향 안정화 되던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악화된 셈이다. 특히 2018년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36%, 2분기 1.39%, 3분기 1.41%, 4분기 1.43%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 평가된다.

채무불이행자비율은 채무불이행자수를 전체 대출자 수로 나눈 값이다. 즉 분모인 전체 대출자 수가 급증하면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다. 그만큼 대출보다 연체 증가세가 확연한 추이라는 뜻이다.

◆ 연체를 '경보', 저소득·30~40대 '타격'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두드러졌다.

신용등급 최하등급인 10등급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2017년 말 53.14%에서 지난해 말 58.10%로 4.96%포인트 올라갔다. 같은 기간 9등급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1.22%포인트 개선됐지만 8등급은 0.39%포인트 악화했다.

소득수준별로 봤을 때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층에서 타격이 컸다.

1년간 채무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을 보면 소득 3000만~4000만원 구간이 0.27%포인트로 가장 컸고, 1000만원 이하가 0.16%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채무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이 0.24%포인트로 가장 컸다. 30

대가 0.12%포인트, 50대가 0.08%포인트 순이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에서 연체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업권별로는 카드업계의 채무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이 0.41%포인트로 가장 컸고 캐피탈 0.24%포인트, 은행 0.14%포인트, 상호금융 0.09%포인트 등 순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근로자의 1.4배에 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높아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윤열 의원은 "전체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면 가계부채 전반에 걸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영미 기자 sonumij301@metroseoul.co.kr



시민들과 함께 '대보름축제'
기를 하고 있다.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서울로7017에서 열린 '대보름축제, 서울로 밝기'에서 풍물패가 대보름 다리 밝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中 무역갈등, 韓-아세안 경험 키운다

아세안 대외무역 현황·발전방향

단기적으로 아세안 수출증가세 제약
전기전자·기계류 등 수출 부진 예상

미·중 무역갈등으로 아세안 국가와 한국 및 일본 간 경제협력 관계가 넓어질 것 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가간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아세안 국가의 대외무역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간 무역갈등과 이에 따른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강화는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의 무역을 통한 경제협력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강화 등 세계 경제 여건 변화는 아세안 5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대외무역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중간재 수출과 아세안 5국의 최종재 생산으로 결합된 역내 가치사슬이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일시적으로 악화되면서 아세안의 수출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부과 항목에 다수가 포함된 전기전자,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

출결합도와 역내 가치사슬의 전방참여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이 보다 강화될 경우 향후 아세안과 중국간 상호협력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아세안 5국과 중국 간 연계성 약화 우려는 투자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중국은 대외확장정책인 '일대일로'의 틀 안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미국의 견제가 인프라투자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아세안 5국과 중국 간의 협력관계가 다소 정체되면서 한국, 일본과는 역내 분업화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가 보다 밀접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을 보면 중간재, 자본재 부문에서 최근 10년중(2008~17년) 각각 연평균 14.0%, 13.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아세안 중간재, 자본재 수출도 최근 2~3년중 감소 추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내수중심 전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는 금융, 법률, 기업컨설팅 등 상업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무역구조가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주택시장 흑한기... 매매 '뚝' 전·월세 '쑥'

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하락
'내집마련' 시기 늦추는 분위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매가를 비롯해 전·월세 가격 모두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집값이 빠르게 내려가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매 거래가 뚝 끊기고 임대 거래가 활발해졌다. 주택 시장 흑한기에 수요자들이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는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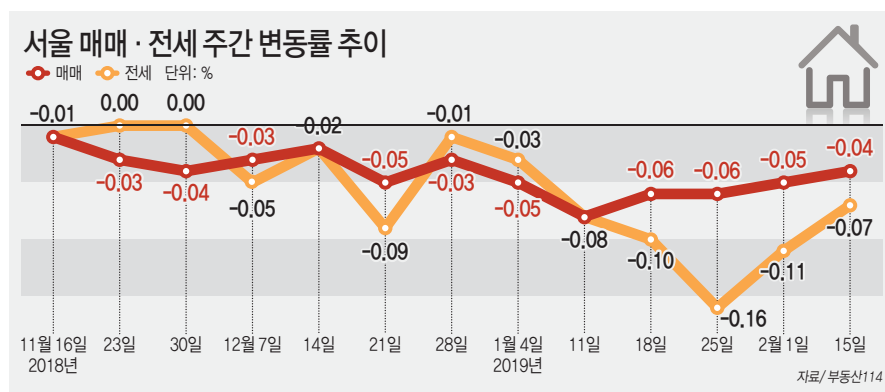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떨어져 13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시장도 0.09% 내려 15주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 떨어져 5주 연속 약세다.

서울은 용산을 제외한 송파(-0.13%), 강남(-0.09%), 서대문(-0.06%), 양천(-0.06%), 강동(-0.05%), 마포(-0.04%)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10주 연속 떨어졌다.

서울은 0.07% 하락하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7%, -0.09%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송파 헬리오시티' 등 강남권 대규모 입주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하락세가 강동을 넘어 광진, 중구, 종로 일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별로 강동(-0.26%), 광진(-0.25%), 중구(-0.24%), 종로(-0.19%) 등이 전주 대비 -0.20% 안팎 내려갔다. 신도시도 위례(-0.30%), 평촌(-0.24%), 동탄(-0.07%), 산본(-0.



06%), 중동(-0.05%), 일산(-0.04%)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지역 매매·전세 동반 하락은 10주 연속으로, 이는 2012년 16주 연속(3월 9일~6월 22일) 동반 하락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월세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투·쓰리룸의 평균 월세는 65만원으로 전월의 70만원에 비해 7.14% 하락했다. 작년 1월(75만원)보다는 13.3%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지역 전용면적 60㎡이하 투·쓰리룸 등 록 매출의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결과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의 청약·대출 문턱을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늘렸다. 최근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도 인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단독주택과 토지가격에 대한 표준공시가

격 발표 이후 보유세 상승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매매가 하락에도 집을 장만하기 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며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추가 하락 기대감을 품고 '내집마련' 시기를 미루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877건으로 전년 동월(1만198건)의 18.4%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월세 거래량은 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1000건으로 전년(167만4000건) 대비 9.4% 증가했다. 3년 평균(165만 5000건)과 대비해서도 10.6% 늘었다.

이런 분위기에 시장에선 좀처럼 매매 거래 절벽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수요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입 시기를 뒤로 미루는 분위기"라며 "거래 위축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정유사 정제마진 약세... 팔수록 '손해'

지난해 4분기부터 급락 시작

정유사의 주요 수익으로 이어지는 정제마진이 지난해 4분기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

운영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올해 1월 넷째 주 배럴당 1.7달러 바닥을 찍은 후 1월 다섯째 주 1.9달러, 2월 첫째 주 2.4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국내 정유사

손익분기점(4~5달러)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지면 석유제품을 생산할수록 적자가 쌓이게 된다.

업계에서는 올 1분기에 반등을 기대했지만 정제마진의 회복세가 더디는 등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1달래대까지 내려앉아 올해 1분기에도 적자 탈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ujjin6326@